

금투세 유예 vs 시행... 민주, 토론회서 당론 결정

금융투자소득세

오늘 전·현직 의원 10명 정책토론 혁신당 등 야4당 “유예 없이 시행” 당내 ‘금투세 토론 역할극’ 논란도 국힘 “국민 기만은 분노 초래”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 정책토론회를 열고 당론을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야 4당이 금투세를 유예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4당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정부·여당이 폐지 방침을 밝히고,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시행 유예·완화를 언급하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에 야 4당은 “여야가 지난 2020년 12월 합의로 도입한 금투세를 뒤늦게 한 차례 시행을 유예해놓고 재차 유예, 나아가 폐지를 거론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그 사이 1400만 개미 학살, 주가 폭락 등 근거없는 반대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됐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는 크게 훼손됐다”며 “내년 1월 금투세 시행까지 딱 100일이 남은 만큼 이제는 금투세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근로소득세처럼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마땅하다”며 “금융자산 과세 강화 등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을 마련하되 개인투자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을 향해 “2년 연속 세수 평가가 가시화되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데도 금투세 시행을 미뤄야 하는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금투세는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제2의 금융실명제이자 자본시장실명제인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재명 대표의 의중대로 ‘유예 후 보완’에 쏠렸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전히 원칙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런 와중에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시행 토론회를 앞두고 일부 투자자의 항의 문자에 “이번 토론회는 디베이트 토론으로 역할극의 일부다”라고 답해 ‘금투세 토론 역할극’ 논란까지 일어났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민기만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초래할 뿐이다”라고 비난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내일 개최하는 금투세 토론회를 두고 ‘역할극 일부’라는 발언이 나왔다”며 “1400만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정작 논의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은 민주당이 국민을 우롱하는 대국민 사

기극에 당력을 총동원하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그는 “국민적 관심을 끌 요량으로 앞서는 토론하겠다고 해놓고,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역할극을 펼치는 기만술 아니겠나”라며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쇼에만 매진하겠다는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1400만 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금투세 폐지를 포함해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라며 “국민 농락을 멈추지 않는다면, 민주당을 향한 분노는 더 거세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토론회는 전·현직 의원 10명이 5명씩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눠 진행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윤 대통령 “남부지방 호우 피해 복구에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남부 지방 집중 호우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남부 지방 호우 피해 복구에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정세진 대변인은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9~21일 최대 50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크고작은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7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1014세대 1501명이 긴급 대피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전남 등에서 주택 침수 170건이 발생했고, 상가(26건), 공장(3건), 병원(1건), 전통시장(1건), 차량(2건) 등도 물에 잠겼다.

약 4116ha 면적에 달하는 농작물이 침수 피해를 입기도 했다.

경남과 충북 등에서는 도로 침수 107건, 경남 등에서 토사 유출 21건, 충남에서 옹벽 붕괴 등이 발생했다.

부산 사상구에서는 씽크홀(도로파손)이 발생해 현재 원인 파악과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과 강선우 위원 등이 23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의료대란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양부남 “지역신보 대위변제액 60% 증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를·사진)은 23일 올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4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9.9% 늘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대위변제액은 전년동



기 대비 세종 4배(18억→74억), 강원 2.2배(256억→567억), 충북 94.8%(175억→341억), 경기 94.6%(1667억→3245억), 부산 77.1%(626억→1109억), 인천 74%(548억→954억), 광주 72.5%(211억→364억) 순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양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안도걸 “가상자산 상위 1% 투자 금액 70% 차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 남구을·사진)은 23일 “양대 코인마켓(업비트, 빗썸)에 개설된 가상자산 계좌 770만 개를 분석한 결과, 1억원이 넘는 가상자산 계좌수는 전체 1%에 불과했으나 투자 규모는 전체 금액의 7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말 기준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에 개설된 1669만 개 계좌 중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활성화 계좌는 절반 이하인 770만개였다.

투자자들의 평균 보유액은 893만원이었다.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68조8000억원 규모이다. 1000만원 이하를 투자한 계좌수가 전체 92%를 차지했고 이들 소



액 계좌의 평균 투자액은 65만원이었다. 반면, 10억 원이 넘는 초고액 계좌는 총 3400여개로 이들의 총 투자액은 32조1279억원, 1계좌당 평균 보유액은 94억5000만원이었다. 전체 계좌의 0.04%에 불과한 이들은 전체 투자액의 절반 가까운 47%를 보유해 주식시장 보다 쏠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코인은 블록체인과 같은 미래기술산업의 핵심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범죄 등에 악용되지 않고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윤·한, 의료대란 빈손 만찬 안돼”

“소득 없다면 국힘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윤한(윤석열·한동훈) 만찬’과 관련해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라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박주민 위원장 등 대책위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한 만찬이 배만 채우고 성과는 없는 빈손 만찬이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내일(24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찬 회동을 갖는다. 이 만남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크다”며 “부디 밥 먹고 사진만 찍지 말라”고 당부했다.

대책위는 “의료대란은 지금 우리 국민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라며 “추석 당일에도 부산에서 한 30대 여성이 응급실을 찾다 급급차에서 심정지가 왔고,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에게 강

력히 요구한다”며 “더 이상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이번 회동을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으로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구체적인 성과 없이 회동 자체를 성과로 포장하는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번 만남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식사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여가위 통과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도 처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 방지법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

자다.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해당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과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피해 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개정안도 이날 여가위를 통과했다.

서울=김선욱 기자